



2026. 9. 11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시장금리 상승에...5대銀 예금금리 최고 3.4%

매일경제

<https://zrr.kr/alehQy>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증시로 향하던 시중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
국내 은행권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2분기 매달 14조~15조원가량 증가하다가 7월 들어선 약 42조원 급증, 8월에도 약 20조원 증가

카뱅, 인뱅 첫 잔금대출 이달 출시...'1호' 영업대상 주목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BXGMMyr>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잔금대출 시장에 진출
비대면 편의성을 앞세워 시중은행 중심 잔금대출 시장에서 금리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담보대출 중심으로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기대

신탁계정도 증시 쏠림·4대 은행 주식 잔액 반년 새 80% 급증

이투데이

<https://zrr.kr/gd2hMs>

4대 시중은행의 신탁계정 내 주식·지분증권 잔액이 올해 들어 80% 가까이 급증하며 단숨에 30조 원을 돌파
증시 훈풍에 예·적금 대신 고수익을 좇는 자산관리(WM) 고객들의 '머니무브'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

'PB 명가' 하나은행의 힘...유연대용신탁 5조로 업계 1위

서울경제

<https://zrr.kr/cqEH8C>

전통의 프라이빗뱅킹(PB) 명가인 하나은행이 맞춤형 상품을 무기로 유연대용신탁 잔액 5조 원으로 5대 은행(7조 6711억 원)의 60% 이상을 차지
가족 구성과 재산 형태에 따른 맞춤 설계도 가능한데 신탁을 고객별로 세분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PB 중심의 자산관리 인프라가 중심

'수익률 부진한데 환차손까지'... 서학개미 발동동

매일경제

<https://zrr.kr/ciTyod>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강세로 해외 투자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서는 향후 주가 상승과 원화값 하락을 예상하며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미국 증시에 뭉치듯 투자를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

하루 38조 왔다갔다 했는데... ETF 거래대금 3개월 새 반토막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NM5b9u>

7월 중시 급락 이후 ETF 시가총액은 반등과 함께 회복하고 있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은 6월보다 50% 넘게 감소
개인투자자도 최근 반등장에서 대표지수와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대거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예보로 날벼락에 손보업계 강력 반발.. "보험업 특성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https://zrr.kr/oOCVCG>

한국금융학회가 예보 의뢰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는 손보업계의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0.50%로 약 3.3배 올리는 방안이 제시
이에 보험업계가 예상보다 큰 인상폭에 부담을 느끼면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를 고려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

승환계약을 첫 공시 늦어지나... '개별 GA 성적표' 공개 범위 촉각

보험매일

<https://zrr.kr/lDw1af>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승환 계약을 비교 공시를 도입할 예정
보험회사별뿐 아니라 채널별·상품별 승환 계약을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채널별 공시가 전속·GA 등 모집 채널 구분에 그칠지 개별 GA의 승환 실적까지 보여줄지는 미정

與 디지털자산TF 재편...당대표 직속 AI금융추진단 내로

이데일리

<https://zrr.kr/sMdQqc>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대표 직속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중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 산하 독립 TF 형태로 재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 작업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당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

코인 과세 내년 시행에 가상자산업계 반발... "준비 안 됐다, 유예 필요"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u8lxKQ>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업계가 추가 유예를 요구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업계는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